

# 역사적 진실규명에 기초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 제언 : ‘람지어 사태’의 교훈\*

김주용\*\* · 金泰國\*\*\*

## 〈차 례〉

1. 머리말
2. 램지어 사태의 배경 : 역사오염을 위한 일본 우익-연구자 카르텔 형성
3. 램지어의 계약 이론 비판
4.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연구의 공간적 전회
5. 맺음말

## [국문초록]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국 역사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기사가 매일 마스크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사태’이다. 미국 내에서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논문으로 촉발된 위안부 관련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이에 대한 램지어의 반박, 이를 주창한 학자 램지어의 저서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램지어 사건의 배경과 특성을 명확히 하면서 공간을 통해 역사적 기록과 사실적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고노 담화 이후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2008년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제 강점기 침략에 의한 다른 나라 착취,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체계적으로 오염되거나 파괴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염을 통해 역사전쟁의 현장을 확대하였다. 그 현장은 미국이다. 과거의 전쟁터가 아시아였다면, 현재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의 주전장은 미국이다. 램지어 사건은 개별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책임국가 간의 문제이며 인

\* 2017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279 082).

\*\* 주저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 공동저자, 중국 연변대학 역사학과 교수

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공간적 중요성은 역사적 사실을 오염시키고 오늘날 모든 국가 간의 증오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램지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글이 세계 각국 국민 간의 갈등에 대한 책임과 법적 규제 권한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공간소환을 통해 위안소의 위치를 면밀히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은 일본제국의 광기시대 이민에 대한 침략과 착취의 역사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타락한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자 한다.

[주제어] 램지어(J.Mark Ramseyer), '일본군위안부', 역사전쟁, 동북아, 공간적 전회

## 1. 머리말

동남아 교통과 금융의 허브 싱가포르에는 일본군과 관련된 사적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 바로 일본인 공원묘지이다. 이 묘지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이전 사망한 조선인들이 묻혀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는 한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가 몇 군데 더 있다. 하나는 코리안 가드로 활동하다가 BC급 전범으로 처형당한 창이형무소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센토사 섬의 조선인 위안부의 공간이다.<sup>1)</sup> 일본군 위안소가 센토사 섬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바가 없다.<sup>2)</sup> 이처럼 일본군 위안소는 동북아,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국 역사학계를 뜨겁게 달군 기사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였다.<sup>3)</sup> 이른바 '하버드대 램지어(J.Mark Ramseyer) 사태'이다. 그가 발표한 논문 「태평양전쟁중의 매춘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으로 인해 촉발된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미국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대응<sup>4)</sup>과 램지어 본인이 이에 대한 반박, 또한 램지어를

1) 2005년 11월 10일 독립기념관에서 시행했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 당시 확인.

2) 센토사 섬이 언론에 주목받았던 사실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였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에게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워킹홀리데이로 인식되어 있다.

3) 위안부 문제로 한국 사회(언론)를 뜨겁게 달군 것은 '박유하 사태'가 아닌가 한다. 2013년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뿌리와이파리, 2013이 출간된 후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강성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과 해결-제국의 위안부의 비판적 독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제언」, 『황해문화』 91, 2016 참조).

옹호하는 학자들의 글들이 언론에 실리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 글에서는 랩지어 사태의 배경과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역사적 기록과 사실의 문제를 공간을 통해 조명하려고 한다.<sup>6)</sup> 일본은 고노담화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였으며,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2008년 아베 정권 이후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타국에 대한 침략과 수탈 및 인권유린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적으로 사실이 오염되거나 훼손되기 시작하였다.<sup>7)</sup> 그리고 일본은 역사적 사실에 대

- 
- 4) 2021년 3월 27일 일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에는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학 이진희 교수와 영상 대담을 통해서 랩지어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다. 이 글 제2장은 이진희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서술하였다.
- 5) 랩지어 옹호 관련 책자는 미디어위치에서 세계 자유, 보수의 소리 총서로 발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2권에 해당된다. 이 책의 제목 『한국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가난의 굴레에 희생자인가 강제로 연행된 성노예인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랩지어의 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니시오카 쓰토무, 『한국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가난의 굴레에 희생자인가 강제로 연행된 성노예인가』, 미디어위치, 2021 참조). 특히 니시오카 쓰토무의 글 가운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쟁터에서의 민심 이간제에 대해 걱정하는 군이 하물며 일부에서는 항일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벌이고 조선에서 민심 이간을 유발할 리가 없다”라는 대목은 1938년 국민총동원령 이후 제국주의 일본의 행태를 완전히 부정하는 서술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 6)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는 기관과 개인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15년 이후 최근까지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정현, 「한중일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 성과와 과제 -역사수정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 『한일관계사연구』 제69집, 2020; 강경자, 「대일전범재판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도쿄재판의 전범기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52집, 2020; 김정현,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동북아 역사논총』 제66호, 2019;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제66호, 2019; 박정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와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2019; 박정애,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조선인 '위안부'」, 『아시아여성연구』 55-1, 2016.
- 7) 한국 학자들도 위안부 논쟁에 적극 참여했다. ‘랩지어 사태’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표자로는 랩지어 교수를 앞장서서 비판해온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와 랩지어 논문에 대한 반박문을 쓴 글로벌 일본사 연구자 5인 중의 한 명인 첼시 샌디 슈이더 아오야마가 쿠인대 교수,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 연구자인 송연옥 아오야마가쿠인대 명예 교수, 한국인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주제로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명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소장직무대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채록 및 실태를 연구한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한다고 했다(이데일리, 2021년 4월 13일자). 지금까지 랩지어 사태 관련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지민, 「미국 시민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과 랩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란」, 『역사비평』 135호, 2021; 김창록, 「랩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비평』 135호, 2021; 홍승기, 「마크 랩지어의 '위안부' 성격약 비판」, 『법학연구』 24-4, 2021; 박정애,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랩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 『여성과 역사』 34, 2021; 강성현, 「랩지어 사태'로 본 역사부정의 논리와 수법비판」, 『황해문화』 111, 2021.

한 오염을 통해 역사전쟁의 현장을 확대했다. 그 현장은 미국이다. 과거의 전쟁터가 아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의 주전장은 미국이 된 셈이다.<sup>8)</sup>

‘램지어 사태’는 단지 개인 학자의 문제가 아닌 전쟁 책임자인 국가 간의 문제이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다. 역사적 사실을 오염시키고 오늘날 민족 간의 혐오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램지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공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글이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민족 간의 갈등의 책임과 법적 규정력을 적용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간적 소환을 통한 위안소 설치 장소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조사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의 ‘광란의 시대’에 자행되었던 이민족에 대한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强盜의 연민’이 아닌 ‘强盜의 실상’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sup>9)</sup>

한국학계에서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독점성과 권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본질보다는 당대 현상에 치중하여 연구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적 상상력에 기초한 연구의 취약성은 일본의 공격성에 촉매제이자 동반자일 뿐이다.<sup>10)</sup> 이미 오염된 우물의 근본원인

8) 램지어 교수는 미국 이스턴 일리노이드 대학교 이진희 교수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 언론에서도 이를 크게 다루었다. “역사학자들은 램지어가 자신이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극우 세력과 꾸준히 교류해온 램지어가, 직접 협박성 메일을 보냈으로써 공격 사인을 내린 것이라 분석도 있다”고 했다(파이낸셜뉴스, 2021년 5월 7일). 김지민, 「미국 시민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란」, 『역사비평』 135호, 2021 참조.

9) 동북아지역 설치된 위안소 가운데 중요 지역의 위안소를 공간적 전희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했다. 다만 중국 우한, 만주지역 위안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만주지역 위안소 관련 연구는 박정애, 「만주 지역의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조선인 위안부」, 『아시아여성연구』 55-1, 2016 참조. 다만 박정애 글에서도 위안소의 정확한 위치 비정은 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신성자구촌 위안소의 경우 명확하게 위치비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소만 국경지대였던 동녕요새는 일제가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의 남진을 막기 위해 17만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거대한 요새를 구축했다. 동녕 요새는 소련군이 1945년 8월 9일 수습 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했는데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다. 제국주의 일본은 동녕 요새 주위에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다. 동녕요새에서 동녕현성을 지나 수분하 쪽으로 8km 정도 위치에 신성자구촌에 자리한 ‘일본군위안소’의 건물은 없어졌으나, 현재 군부대 관련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의독립운동사적지조사 보고서』 16, 2016, 116~119쪽).

10) 대표적으로 이영훈 외, 『반일종족주의』, 미래사, 2019을 들 수 있다.

을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우물에서 떠 온 오염된 물만 닦하는 것이 현재 '일본군위안부'를 둘러싼 역사수정론자들이 벌인 공방의 본질이 아닐까.

## 2. 램지어 사태의 배경 : 역사오염을 위한 일본 우익-연구자 카르텔 형성

전후 패전의 책임을 천황(일왕)에게 묻고 있는 가 아닌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태평양전쟁의 전범 가운데 최고위는 천황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천황은 오히려 전범이 아니라 꼭 존속해야 할 존재였다. 1945년 8월 14일, 패전 전날 오전에 열린 어전 회의에서 천황은 “씨앗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한다면 부흥이라는 광명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며 일본의 재생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수상관저가 습격당했다. 다음날 ‘옥음방송’이 흘러 나왔다.<sup>11)</sup> 제국주의 일본의 항복은 또 다른 이민족의 점령을 의미했다. 미국은 일본의 점령통치를 추진하면서 천황의 존재를 중시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맥아더의 방침이기도 했다. 그것이 천황이 전범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희석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원도 이곳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여진다.<sup>12)</sup>

위안부를 둘러싼 공방의 중심에선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대사, 한국군대사와 관련된 논문들을 작성해왔으며 위안부, 조선인, 부락민 등 일제강점기 문제를 주제로 다뤄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최근에 출간된 위안부 관련 논문으로, 이로 인해 사태가 촉발되었다. 먼저 사태의 경과를 보면, 위안부 관련 논문은 2020년 12월 1일 네덜란드 엘제비어(Elsevier) 출판사의 법학, 경제학 관련 학술지를 통해 출간되었다. 출판사는 발표 이후 원문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며 비판이 있다면 반박문 등을 같이 게재하는

11) 가사하라 히데히코 지음, 유지아 옮김, 『상징 천황제와 황위 계승』, 경인출판사, 2020, 32쪽.

12) 박정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와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2019, 49쪽.

형식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반발이 높아지고 저명한 학자들의 비판이 강해지자 철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 영자 신문인 “저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1월 초 기고문이 실리면서 문제의 논문이 한국과 일본에 알렸으며 한국 언론들이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2월 하버드 대학교 내 학생 단체 역시 조직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한인학생회, 여성 운동가들의 항의 성명이 이어지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소속인 석지영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램지어 교수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본 우익단체가 대응하면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한국, 미국, 호주 등 각국의 한국학 학자들이 해당 논문을 비판하면서 학술지 출판사 역시 논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되고, 이 문제가 시민 사회의 관심까지 끌게 되면서 미국 내 시민단체 및 지방 자치단체 역시 본격적으로 비판에 가세하였다. 2월 중순 이후 SNS 내 비판이 확대되고 미국 현지 언론인 The New Yorker가 이에 관한 보도를 하며 미국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3월 3.1절, 세계 여성의 날(3.8) 등 기념일에 더욱 화제가 되며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sup>13)</sup>

하지만 이 논문이 동료 연구자들의 심사를 통과하여 발표된 만큼, 이 문제가 왜 사전에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꾸준히 한일관계의 중요한 역사적 문제로 다뤄져 왔다.<sup>14)</sup> 일본 역시 1993년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 간접적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 이후 교과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강해지며 일본 우익과 그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도 재검토하게 되었다.<sup>15)</sup> 일본 정부가 우익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보통국가로서 군대를 보유

13) 『SBS뉴스』 2021년 2월 27, 「매춘계약서 없다. 궁지몰려 실토」; 『연합뉴스』 2021년 3월 9일, 「영국 언론도 램지어 사태 보도」.

14) 박정애, 위의 글, 48쪽.

15) 김지민, 위의 글, 205쪽.

하며 영토 분쟁 중인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재정립하고자 하지만, 전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억이 일본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일본 우익은 계속된 연구와 사료의 발견으로 위안부 문제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는 대신, 이 위안부 문제가 '영리 목적의 개인'에 의한 것으로 왜곡하여 국가와 군대의 책임을 지워버리고자 하고 있다.<sup>16)</sup>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적인 영향력이 큰 미국 내 여론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한미일의 전통적 공조를 강조하며 이를 해하는 주장은 좌파, 혹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대응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문제를 다룬 램지어 교수의 논문들 역시 이 같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내 재일동포의 문제는 강제 이주부터 차별까지 일본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깊이 관여되어 있음에도, 일본 사회에 통합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가진 사상으로 인해 초래된 개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최종 목표는 일본 사회와의 완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내 정치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 학자들에게 호소하며 학계 내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 우익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이슨 모건(Jason Morgan)같은 미국인 학자들과 연대하고 서로 지지하는 식으로 학술적 입장과 가치를 꾸준히 강조하여 일본의 우파적 주장을 여론화 하였다. 특히 여성, 비(非)백인 출신 학자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수적 입장이 강한 법학, 경제학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여론은 급기야 일본외무성이 미국 출판사의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력으로 표출되기도 했다.<sup>18)</sup>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일본 이주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발적으

16) 김지민, 위의 글, 206쪽.

17) 니시오카 쓰토무 지음, 『날조한, 정용공 정용공 없는 문제』, 미디어워치, 2021 참조.

18) 김지민, 앞의 글, 210쪽.

로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에 대해 언급하는 대신 이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좌파 사상에 경도되고 일본 주류 사회와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식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해외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위안부 문제 제기가 북한에게 일본을 비판할 명분을 제공하여 러시아-중국-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강하게 유지되어야 할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사상적,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기도 하였다.<sup>19)</sup>

랩지어 교수는 재일동포 문제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의 경우에도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통계의 부정확한 면을 강조하여 근거에 대한 신뢰 자체를 약하게 하거나, 기존 사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용하며 선행연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일본 우익의 대표적 주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논문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역사적 검증 없이 법학자, 경제학자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론적 성과로 발표가 되고, 이는 남경대학살, 일본군위안부 등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랩지어 사태’는 일본 우익이 영미권 학계에 지원하여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sup>20)</sup>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국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식민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구된 유럽의 제국주의가 가진 폐해와 달리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미국 내 교육계 역시 최근 유럽, 미주 중심으로 세계사를 바라보는 기존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며 아시아, 아프리카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세계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

19) 필자는 2019년 1월 29일 원광대와 중국 연변대, 북한 조선사회과학원과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북한 측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때 북한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였으며, 그들은 ‘성노예자료집’도 제공하였다.

20) 김창록, 앞의 글, 181~182쪽.

침할 수 있는 한국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sup>21)</sup>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 학자들의 연구들이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동아시아사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세계사가 인류 공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학문이 되어가는 만큼, 당대 세계적, 보편적 현상이 반영된 한국사에 대한 연구 역시 인류의 보편적 세계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한국사가 세계사 속에서 가지는 보편적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있는 만큼, 각국 논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램지어의 계약 이론 비판

마크 램지어의 논문 「태평양 전쟁 중 매춘계약」은 1장 서론, 2장 전쟁 이전 일본과 한국의 매춘, 3장 위안소, 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2)</sup> 램지어는 그의 논문 초록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행해진 노동행위이며, 오늘날 성공보수와 같은 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특히 제2장은 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소는 평시 성매매업소의 연장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의 논문 초록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21) 국내의 위안부 및 위안소 관련 연구는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여성가족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에서 자료집 발간, 연구총서 발간을 추진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시관(가칭)과 같은 규모의 기념관 및 박물관 설립과 함께 연구소 설립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보인다. 공간이 확보되면 기록(시간)의 역사 연구는 한층 조직화, 체계화될 수 있다.

22)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2021.

위안소라 불리는 전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지지부진한 정치적 논쟁이 연관된 계약 역학을 모호하게 한다. 이 역학은 기초 게임 이론에 매우 기본적인 “신뢰 가능한 책임”이라는 간단한 논리를 반영했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잠재적 성매매 여성들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첫째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라는 직업으로 인한 성매매 여성에게 미칠 위험과 평판의 피해를 상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관대한 계약구조에 신뢰할만한 책임을 맡아야 했던 반면 둘째 성매매 여성에게 감시 불가능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는 동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sup>23)</sup>

위의 글에서 램지어는 먼저 위안소를 전시성매매 업소로 지칭하였으며, 인권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던 위안부를 성매매의 시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에 따른 전시의 위험수당을 인센티브라고 표현하였다.<sup>24)</sup> ‘게임이론’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논리에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였다.<sup>25)</sup>

램지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을 계약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1930~40년대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본 군(정부)은 민간업자들을 독려해서 기지 옆에 반관적 성매매 업소를 설치했다고 했다.<sup>26)</sup> 일본 정부보다는 민간업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간업자들이 성매매 업소의 직원을 두기 위해 일차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을 고용했으며, 모두 계약을 통해 고용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는 전시 상황을 일상적인 생활과 동일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일본의 여성과 조선의 여성을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경찰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하기도 했다.<sup>27)</sup> 여기에서도 램지어는 ‘면허 성매매’ 업소에서는 모든 새로운 고용에 현찰을 선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매매 업소에서는 고용에는 노역계약에 따랐으며, 이들이 대규모

23) J. Mark Ramseyer, 위의 글, p.1.

24) 한국에서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으로 표현하고 있다.

25) J. Mark Ramseyer, 앞의 글, p.1.

26) J. Mark Ramseyer, 위와 같음.

27) 램지어 글에서 성매매 관련 즉 일본군 위안부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현찰 선입금을 그 외 모든 노동계약조건과 결합했다는 사실을 들었다.<sup>28)</sup> 하지만 전시의 경우는 다르다. 역사부정론자들의 논리대로 공창제의 연장선상에서 전시 위안부를 운영했다고 한다면, 강제성의 문제는 사라지기 때문이다.<sup>29)</sup> 그리고 교묘하게도 '일본군 위안부'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민간업자, 조선의 경우 조선의 민간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가 여성들을 강제로 성매매 시킨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이 사기꾼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모집업자들이 군 위안소에 관심을 집중한 것도 아니었다. 대신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어린 여성들을 속여 일하게 만들어 온 한국 국내 모집업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sup>30)</sup>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강제성'이란 램지어에게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용어일 것이다. 그는 '강제성'을 제외하고 계약과 관련된 용어로 대체했다. 따라서 일본군은 민간업자에게 군의 기준에 맞춘, 즉 성매매자의 질병과 관련된 기준에 충족할 때에만 면허를 내주고 이름을 위안소라고 불렀다고 했다.<sup>31)</sup> 이처럼 램지어는 일본군은 강제로 성매매 여성을 위안소에 둘 필요가 없었으며, 어디에서나 성매매 여성들을 군을 따라다녔으며, 아시아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했다.<sup>32)</sup> 강제성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수행하였음을 강

28) J. Mark Ramseyer, 앞의 글, p.2.

29) 박정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글에서 "전시총동원체제에 집중된 여성의 끌려감 이야기의 정점에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있었다. 일본 본국과 식민지, 관동군 지배지, 위임 통치 지역, 점령지 등에서 일본정부의 행정력이 작동하는 가운데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다. 군의 허가과 감독 속에서 여성들이 업자에게 이끌려 국경을 넘고 위안부 생활을 했다. 일본군과 정부는 위안소 이용을 통해 병사의 군기와 성병을 관리하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군국주의 아래 여성의 성은 군수품처럼 취급되었고, 위안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라고 서술했다(50~51쪽).

30) J. Mark Ramseyer, 앞의 글 p.5.

31) J. Mark Ramseyer, 위와 같음.

32) J. Mark Ramseyer, 위와 같음.

조했다.<sup>33)</sup>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이미 일본군들의 활동이 자유로운 지역이며, 선 거주 조선인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램지어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소에서 종업원 모집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례는 많다.

지나사변지에서 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서 종업부를 모집할 때 고의로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또 일반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종군기자, 위문자 등을 개입시켜 통제를 받지 않고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한자, 혹은 모집을 담당하는 자의 인선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밀줄, 인용자) 경찰 당국에 검거 취조를 받은 자가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한 자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장래 이들 모집 등은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이것을 담당할 인물의 선정을 주도적절하게 하고 그 실시는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군의 위신을 지키면서 사회문제 상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기를 명에 의해 통첩한다.<sup>34)</sup>

모집의 심각성, 군의 강제성 문제에 대해 램지어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sup>35)</sup> 그는 면허 있는 성매매 업소 즉 위안소는 몇 가지 수준에서 일본인 면허 성매매 업소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계약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전시 상황 속에서 성매매 여성이 강압적인 일상생활로 전장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평시의 전형적 계약인 6년이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sup>36)</sup> 하지만 램지어의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계약기간의 단기성, 계약조건 등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시에 강제로 끌려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그 전 과정 자체가 불법, 반인륜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을 배척하는 현재의 역사왜곡의 전형은 이처럼 ‘계약이론’의 큰 맹점이다.

33) 이와 같은 논리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되었다.

34)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1)-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2020, 93쪽.

35) J. Mark Ramseyer, 앞의 글, p.5.

36) J. Mark Ramseyer, 위의 글, p.6.

즉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역사부정론자들의 논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상 몇 가지 조건은 평시와 같았다. 하지만 전시의 계약을 달라야 했다. 램지어는 이 부분도 언급하였다. 다음은 계약 가격에 대한 램지어의 의견이다.

단기간이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임무에 대해, 위안소는 도쿄 성매매 업소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연봉)을 지급했다. 전형적으로 2년 근무에 대해 선금으로 수백 엔을 지급했다. 1937년 상하이 위안소로 모집된 일본 여성들의 샘플 계약서는 500 엔에서 1,000엔을 선금으로 냈으며, 이와 비슷하게 1938년 일본 내무성문서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600~700엔 선불 받고 상하이 위안소로 여행했으며, 2명은 300~500엔을 선 지급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주목해 보자. 훨씬 더 높은 위험성에 연루된 데 대한 보상으로 위안소 성매매 여성들은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한국과 일본 국내의 성매매 여성들은 이미 다른 고용을 통해 벌 수 있는 액수보다 상당히 더 많이 벌었다. 일본에서 6년 기간 100~1,200엔을 벌었던 점을 상기해보자. 위안소에서 일본 출신 성매매 여성들은 2년 기간 600~700엔을 벌었다.<sup>37)</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높은 임금을 책정하여 시행한다고 했지만, 문제는 과연 그 금액이 '위안부'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가라는 것이다. 램지어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성매매 여성의 저축이라는 절에서 “중요한 점은 많은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실제로 선지급으로 준 큰 금액 이상의 금액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sup>38)</sup> 그 근거로 문옥주의 회고록을 인용했다.<sup>39)</sup> 그런데 문옥주 회고록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었다. 문옥주는 미안마지역 '위안부'였다. 일본군은 미안마를 점령하자마자 위안소

37) J. Mark Ramseyer, 위와 같음.

38) J. Mark Ramseyer, 위와 같음.

39) J. Mark Ramseyer, 위와 같음.

설치를 준비하였다. 미얀마 지역은 만주와 중국 대륙과는 달랐다. 즉 일본군이 새롭게 점령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위안소 역시 새로 만들어져야 했다. 대규모의 위안부 동원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sup>40)</sup>

문옥주는 연합군에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심문을 받았다. 그는 만주로 간 이후 다시 미얀마로 2차 동원되었다. 문옥주는 「심문보고서 49호」에서 자신은 취업사기의 형태로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얀마를 통해 중국 운남성 남부로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들을 심문한 결과인 미국의 전략첩보국 보고서 쿤밍의 조선인과 일본인 전쟁 포로에 따르면 1942년 7월 미얀마에 동원된 여성들은 명백하게 강요와 거짓을 통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한다.<sup>41)</sup>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램지어는 아주 극소수의 예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마치 위안부로 동원되면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강제성을 제거하려고 한다.<sup>42)</sup>

램지어는 논문 말미에 1940년대 초 일본군은 전선이 확대되면서 장병들을 소집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모집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고 했다.<sup>43)</sup> 기존의 학자들이 이 시기에 일본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하는 점을 비판하였다.<sup>44)</sup> 그러면서 위안부들이 위안소에서 나와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동남아와 남양군도 지역의 위안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컨대 문옥주가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미얀마는 제국주의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중국의 물자 보급로의 하나였던 미얀마의 수도 양곤과 중국 운남성 昆明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미얀마 로드를 차단하기 위해서

40)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66, 2019, 218쪽.

41) 공준환, 위의 글, 219쪽.

42) J. Mark Ramseyer, 앞의 글, p.6.

43) 일본군은 중국 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쟁 막바지에 몰렸음에도 위안부들을 전선에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山東에서 59사단 일등병 伊藤德治의 구술이 참조된다. 그는 당시 8명 정도의 위안부가 130명의 중대원을 상대했다고 증언했다(田剛·李素楨 主編, 『日本侵華老兵口述歷史證言』, 中華工商聯合出版社, 2017, 81~82쪽).

44) J. Mark Ramseyer, 위와 같음.

일본군이 동원되었다.<sup>45)</sup> 일본군은 양곤 공략을 위해 제15군 휘하의 55사단과 33사단을 투입하였으며, 미얀마 북부를 공략하려고 제18사단과 56사단을 증원 투입하였다. 1942년 중순 미얀마를 완전히 점령한 직후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를 준비하였다. 램지어가 주장한 것처럼 중국 상해와 남경처럼 이전에 일본의 영향력이 미친 곳에는 이미 '성매매'업소가 있다<sup>46)</sup>고 했지만 새로운 아시아의 점령지는 이전에 일본의 영향력이 거의 없던 곳이었기에 위안소도 새로 만들어져야 했다. 다시 말해 해외에 파병된 많은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려면 대규모 위안부 동원이 필요했다는 점을 램지어는 외면했다.<sup>47)</sup>

또한 램지어는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이 가까울수록 폐업하는 성매매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했다.<sup>48)</sup> 램지어는 제국주의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데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했다.<sup>49)</sup> 그는 위안소와 위안부를 전시 경제 논리로만 서술하였으며, 그 준거로 계약이론을 사용하였다. 인권의 문제, 피지배 민족의 문제 등은 그의 논점에서는 제외 대상이었다.

#### 4.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연구의 공간적 전회

2021년 한 언론사에서는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소였던 다이살롱이 철거될 위기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다이살롱 위안소는 1932년부터 1945년까지 14년 장기간 운영되면서 많은 중국, 한국, 일본 여성들이 피해를 겪은 역사적 증거물”이라며 “악명 높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점에

45) 공준환, 앞의 글, 210쪽.

46) J. Mark Ramseyer, 앞의 글 참조.

47) 공준환, 위의 글, 212쪽.

48) J. Mark Ramseyer, 앞의 글, p.7.

49) 니시오카 스토무 지음, 이우연 옮김, 『한국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미디어워치, 2021 참조.

서 이 유적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도했다.<sup>50)</sup>

상하이에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이다. 1848년 영국 조계와 지금도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는 蘇州河를 경계로 하여 홍콩우에 미국 조계가 건설되었는데 이는 1863년 영국조계와 병합되어 공공조계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1849년 상해현성과 영국 조계 사이에 프랑스 조계를 별도로 개설했다. 프랑스 조계는 본국 정부와 프랑스 총영사가 공동국을 지휘하여 조계를 통치하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라 속의 나라(國中之國)'을 만들었던 것이다.

1880년대 갑신정변을 피해온 윤치호, 민영익이 상하이에서 활동했고, 1905년 안중근 의사도 상하이에 와서 민영익을 만나려고 했다. 물론 거절당했지만 말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의 젊은이들은 상하이에 공부를 목적으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신규식, 여운형, 신국권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상하이에는 한국인들에게 소중한 곳이면서,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군 위안소가 있는 공공조계지의 조선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상하이 지역 '일본군위안소'는 오늘날에도 각종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공간으로서 관심이 큰 곳이었다.<sup>51)</sup> 특히 다이살롱은 상하이 일본군 위안소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은 일본이 상해에 건립한 아시아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다. 1931년에 설치되어

50) 『연합신문』, 2021년 3월 28일자, 「세계 첫 위안소 '다이살롱'에 위안부 역사관 만들자」. 당시 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어느 한 국가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된 공간과 기록을 보존할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며 "중국 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문제지만 다이살롱 건물을 위안부 역사관, 나아가 국제 연구 센터 같은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히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처럼 오랜 기간 형성된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을 무너뜨리려는 '수정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한 위안부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역사적 사실을 다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이살롱처럼 중요한 역사적 공간을 더욱 잘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램지어처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이들을 반박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가 사람의 증언과 당시의 공간"이라며 "공간이 사라져버리면 기록의 힘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51) 『연합신문』, 2021년 3월 24일자. 「철거위기의 다이살롱」.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14년간 운영되었다. 1931년 11월 타이사룽은 해군지정 위안소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1932년에 상해에만 17곳의 '일본해군위안소'가 운영되었다. 1920년대 타이사룽은 처음에는 '다이'로 불렸다. 영업점의 성격도 일본식 풍속을 띠었다. 각종 음료가 제공되고 기생들도 있었다. 1930년대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타이사룽' 또는 '다이후이관(大一會館)'으로 불렸다. 1931년 11월 일본해군육전대 사령부에서 상해 해군육전대의 안정적인 '성복부'를 제공하기 위해 흥커우구에 해군 특별 위안소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타이사룽이 가장 먼저 선정, 운영되었다. 1932년 상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안소의 위안부는 163명이었다.

타이사룽은 서양식 적벽돌 구조의 2층 건물이며, 일본식 화원도 있다. 처음 이곳에는 7명 전후 위안부가 있었으며, 상해에 주둔한 일본군이 증가하자 옆의 중국인 집까지 터서 '위안소'를 운영하였다. 1930년 대 중반 이후에는 20여 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패망 때까지 타이사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일본해군이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상하이 지역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의 보호와 갱생을 위한 단체로서 한국부녀공제회가 성립되었다.<sup>52)</sup> 부녀공제회는 설립 목적과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규칙은 첫째 건국정신에 입각하여 부덕을 배양할 것이며, 둘째 항상 청결과 정돈에 착심하여 심신의 수양에 면려할 것이었다. 일본군 위안부들을 수용하였던 부녀공제회에서는 부녀자 27명을 수용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조선 동포자매'에게 가했던 반 인륜적 행위 등을 규탄하는 결성 취지 하에 성립되었던 부녀공제회를 통해 위안부의 귀환이 추진되었다.<sup>53)</sup>

한편 2013년 12월 13일 중국정부는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제1회 국가공

52) 황선익, 「해방 후 중국 상해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2016, 83쪽. 최근 중국 우한 지역 일본군 위안부와 해방 이후 귀환문제를 다룬 연구도 나왔다(주영음, 「1945~1946년 중국 우한 지역 한인의 수용과 귀환 -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74, 2021)

53) 황선익, 위의 글, 82쪽.

제일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2년 뒤 利濟巷慰安所舊址陳列館을 개관하였다. 당시 일본 아베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역사오염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南京은 국민정부의 수도이자, 제국주의 일본군 화중 파견군의 사령부였다. 일본군은 국민정부 수도인 남경을 함락하면 중국인들의 항일 예봉을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sup>54)</sup> 하지만 국민정부가 중경에 임시수도를 정하고 결사항전 태세에 들어가 중일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일본군은 상해와 마찬가지로 남경에도 위안소를 개설하였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 일본군이 南京을 공략할 때 수많은 중국여성을 강간하였다. 당시 일본군 사령관 松井石根는 침략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병 확산을 방지하고 일본군의 전투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군 위안소 설치를 명했다. 1937년 12월 11일 화중방면군은 일본인 위안부를 중국으로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거주 일본인 업자에게 민간 위안소 개설을 요청하였다.<sup>55)</sup>

이처럼 일본 군부는 점령지에서 강간 방지를 위해 단기간의 지점과 위안부 인원이 고정되지 않는 임시 위안소를 만들었다. 난징 학살 기간 동안 이러한 위안소는 광범위하게 존재하였고, 기차와 군용차량을 임시 위안소로 충당하였다. 일본군 임시 위안소는 난징 점령 초기에 비교적 많았지만 비교적 단기간 존속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일본군 직영 위안소는 제16사단 제33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 위안소가 있었다. 군표를 사용하였으며, 표는 민간 상인이 팔았다. 같

54) 당시 중국군 장교로 참전했던 김홍일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상해에서 후퇴한 중국군은 또 전락대로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여 지연 작전을 폈지만 12월 13일에는 부득이 南京을 적의 수중에 내주고 말았다. 남경을 점령했을 당시 일본의 포악성을 극에 달한 느낌이었다. 기가 막힌 일은 사람 많이 죽이기 대회까지 개최했다. 그 때 사람 죽이기 내기에서 어느 일병은 일본도로 단숨에 40여 명의 무고한 중국인의 목을 베었다 하여 1등을 차지했다. 당시 상해의 일본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선 그 1등한 병사를 대대적으로 찬양하고 선전하느라 복새를 떨었으니 생각하면 그들의 정신이 도저히 성한 것이라 볼 수가 없었다”(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316~317쪽).

55) 김정현,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동북아역사논총』 66, 2019, 165~166쪽. 남경지역 일본군 위안소 설치 관련 서술은 김정현의 글을 참조하였다.

은 사단 제38연대 제1대대 제9중대에는 天野 중위가 중대 주둔지에 설치한 아마노중대 위안소, 금릉여자대학 교수 비트린이 1938년 4월 30일 고아원을 설치할 장소를 조사하기 위해 난징 동교의 유족학교에 갔을 때 발견한 유족 학교 위안소, 광화문 부근 위안소, 女郎屋 위안소, 포구고대방 위안소, 포구 왕이방 위안소, 천복구락부, 인락주점 위안소, 오대산 좌소항 위안소, 진촌 위안소 등이었다.<sup>56)</sup>

위안소에 도착하자 놈들은 우리에게 일본 기모노를 입히고 머리도 일본식으로 잘라버리고는 나에게 '우따마루'라는 일본 이름을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한사람씩 따로따로 방에 밀어 넣었는데 얼마 지나서 왜놈군대가 방에 들어오더니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내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그지는 짐승같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리고 치다가 나중에는 군도를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다. 우리는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을 하루에도 20~30명이나 치러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공손하지 않게 대하면 놈들은 마구 폭행을 가했으며, 나중에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질질 끌어가다가 처벌방에 처넣곤 하였다.<sup>57)</sup>

위의 글은 남경 利濟巷 위안소에서 참혹한 생활을 했던 박영심의 구술자료이다. 남경 이제항 동운 위안소에서 3년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박영심은 위안소에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여 많은 상흔이 몸에 남아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위안소에서 아편을 피웠다.<sup>58)</sup> 그리고 1942년 5월 박영심은 다시 미얀마 지역으로 강제 이동하였다.

일제는 중국 동북지역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흑룡강성 東寧 요새 주위에 일본군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일본군은 군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본여자와 조선 여인, 중국 여인 등 1000여명의 위안부를 기차로 실어왔고, 동녕 5진에는 20여개의 위안소가 설치돼 있었다. 동녕의 경로당에는 당시의

56) 김정현, 위의 글, 171~172쪽.

57) 황호남·손철수·김춘실,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연행 진상규명문헌자료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47쪽.

58) 김정현, 앞의 글, 186쪽.

위안부도 살고 있었다. 동녕 요새에서 동녕현성을 지나 수분하 쪽으로 8km 정도 위치에 자리한 일본군위안소의 건물은 현재 없어졌으나, 군부대 관련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sup>59)</sup>

흑룡강성 東安<sup>60)</sup>에 동안헌병부대가 설치되었으며, 항일전쟁 시기 위안부에 관련된 상황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특히 군사시설 자원의 보호를 강조하면서 “특수 위안부 시설에 대해서는 군의 요구에 기초하여 헌병은 적극적으로 감독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업무는 자칫하면 각종 폐해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위에게 전담시켜 비위의 예방에 유의하고 있다”<sup>61)</sup>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 일본이 ‘위안소’를 군대 시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흑룡강성 동안헌병소 관할 군 특수 위안시설에 관해서는 마쓰이(松井) 오장이 담당하였다. 그는 지문 사무 및 각종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도 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941년 10월 흑룡강 綏芬河에 ‘위안소’를 경영할 조선인 업자 白川이 10여 명을 데리고 도착하였는데 장소가 수리중이어서 관사에서 투숙중이며 위안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소한다는 보고도 있다.<sup>62)</sup> 특히 수이편허 조선인 요리점 업자가 당시 일본군 측에서 조선 각지 경찰서와 헌병대를 통해 만주에서 위안소를 경영할 업자를 모집하였고, 응모자가 많아서 그들을

59)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16, 2016, 116쪽. 신성자구촌 중심에서 약 1km 동쪽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일본군 위안소 건물은 없어졌으며, 터만 남았다. 마을 주민 손 선생은 지금도 이 마을에는 일본군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수많은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일본군위안소에 있었다고 한다. 한중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60) 원래 이름은 東安街로 密山縣에 위치한다. 중화민국 초기에는 ‘얼다오강’이라고 불렸다. 1938년에 철도가 개통되어 일반적으로 新密山(신밀산현도인 라오밀산에 해당)으로 알려진 기차역이 설치되었다. 1939년 5월 28일 무단장성급 관공서 명령은 ‘신미산’을 ‘동안’으로 개칭하고 동안성의 성도로 하였다. 1942년 1월 1일, 미산현 경내에서 동안가가 분리되어 동안시가 설치되었으며 동안성의 관할 하에 있다. 1943년 10월 등만 본성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1945년 5월 등만 성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45년 ‘9·3’ 항일전쟁 승리 후 허장성의 관할로 편입되었다. 1946년 4월 쑤이닝성의 관할로 편입되었고, 같은 해 6월 툴장성은 동안 특별구(1947년 2월 제2 특별구로 변경)에 속하며 동안 전문 관공서의 주둔지이다. 1947년 8월 무단장성의 관할로 지정되었다. 1948년 7월, 무단장성 건설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안시를 폐지하고 밀산현에 합병했다.

61)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2)-위안소 운영실태와 범죄 처벌-』, 2020, 123쪽.

62)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군 ‘위안부’ 자료 목록집(4)-중국지역, 타이완지역, 타이지역 자료편』, 2018, 150쪽.

만주 각지에서 지정하였다고 했다.<sup>63)</sup> 이와 같이 제국 일본은 군을 통해 민간 업자를 동원하여 '위안소'를 흑룡강성 각지에 설치하였다.<sup>64)</sup>

일본군 위안소의 공간 범위로는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은 일본군 위안소의 조선 여성들의 고난의 장소였다.<sup>65)</sup> 싱가포르는 지금도 세계 물동량의 탑을 자랑하고 있는 주룽부 두가 있다. 싱가포르는 제국주의 일본군이 패망하고 한 달 뒤인 9월 12일에 공식적으로 해방되었다. 싱가포르에는 일본군으로 징집되었던 연합군 포로 감시원을 비롯한 군속 및 위안부 가운데 전범으로 분류된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귀환을 위해 창이수용소에 집단 수용되었다.<sup>66)</sup>

싱가포르처럼 동남아 지역에는 주둔지 위안소 규정을 두었다. 미얀마 만달레이 주둔지 사령부에는 다음과 같은 주둔지 위안소 규정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주둔지 위안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위안소는 일본군인 군속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군인 군속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아래의 각 사항을 엄수한다는 전제로 당분간 만달레이 주재 일본인은 24시 30분 이후에 한하여 특별히 登樓를 허가한다. 따라서 24시 30분 이전에 입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7조 위안소에서 영업자 또는 위안부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거나 또는 금전 등의 강요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그 요지를 소속 대장을 통하여 주둔지 사령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행 등의 행위는 없어야 한다.<sup>67)</sup>

이 규정 총칙은 동남아 지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에 위안소를

63) 위와 같음.

64) 동북아역사재단, 앞의 책, 151~152쪽.

65)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조사 보고서』 4, 2004. 참조.

66)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위의 책, 82쪽.

67) 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2)-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처벌』, 2020, 176~177쪽.

설치하였다. 그에 따른 제 규정을 두고 위안소를 운영한 것이다. 제7조의 경우 위안부에 대한 어떠한 구타와 폭행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이 기존에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외출도 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공간 속에서 위안부들의 삶의 일상은 평시에는 견딜 수 없는 ‘전쟁의 역병’이었다.

## 5. 맺음말

‘램지어 사태’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그 연원은 1945년 8월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과 함께 잉태되었다. ‘전범 천황’으로 처리되었다면 불거지지 않을 문제였을 것이다. 연합국은 도쿄재판 등을 통해서 제국주의 일본의 전범을 처리했다. 심지어 싱가포르 창이형무소에서 BC급 전범으로 조선인들이 사형을 당했다. 이른바 코리안 가드였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 천황은 ‘면피’했다.

램지어는 그의 글에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거세하고자 했다. 그 강제성의 희석화, 그것은 천황의 책임이 아닌 전쟁에 참여했던 일반인의 책임으로 둔갑시키는 고도의 ‘마술’이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램지어의 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범재판 때 다루었던 위안부 자료들이 세상에 좀 더 많이 발굴 공개되어야 한다. 수많은 전범 자료들 속에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고 이를 통해 위안부 연구의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정치적인 위안부 연구가 어느 정도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범 재판 자료들을 활용한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검증된 자료를 통한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진행은 역사부정론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램지어의 연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안부 연구와 상치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전범재판 자료는 역사적 왜곡을 시정하

고 진실규명의 실증이며,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세계사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영미권 내에서 고조되는 만큼, 한국사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주목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를 책임지는 학계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영미권 연구자들 역시 한국사 관련 자료를 직접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1차 사료 번역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내에도 위안부 등 일제 시기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 동아시아지역 국가와 공조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본군 위안소' 설치 장소의 역사적 연원과 현재 실태를 규명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 같은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일회성 공간조사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조사와 보존이 병행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간적 전회로서 인문지리학적 연구방법론을 수용한다면 기록에서 간과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 참고문헌

- 김홍일, 『대륙의 분노』, 문조사, 1972.
- 가사하라 히데히코 지음, 유지아 옮김, 『상징 천황제와 황위 계승』, 경인출판사, 2020.
- 니시오카 스토무 지음, 이우연 옮김, 『한국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미디어워치, 2021.
-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조사 보고서』 4, 2004.
-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1)-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2020.
- 황호남·손철수·김춘실,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연행 진상규명문헌자료집』,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2017.
- 강성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과 해결-제국의 위안부의 비판적 독해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제언, 『황해문화』, 91, 2016.
- \_\_\_\_\_, 「'램지어 사태'로 본 역사부정의 논리와 수법비판」, 『황해문화』 111, 2021.
-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제66호, 2019.
- 김정현, 「난징[南京] 점령지의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 『동북아역사논총』 제66호, 2019.
- 김지민, 「미국 시민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인식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란」, 『역사비평』 135호, 2021
- 김창록, 「'램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비평』 135호, 2021.
- 박정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와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2019.
- \_\_\_\_\_,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램지어와 역사수정주의 비판」, 『여성과 역사』 34, 2021.
- J,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2021.
- 황선익, 「해방 후 중국 상해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2016.
- 홍승기,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성계약 비판」, 『법학연구』 24-4, 2021.

## 基于历史真相调查的“日军慰安妇”相关研究建议 ：“拉姆塞耶事件”的教训

金周溶\* · 金泰國\*\*

最近,一篇因日本军慰安妇问题引起韩国历史学界热议的文章每天都在媒体上引起轰动。这就是所谓的“哈佛大学马克·拉姆塞耶(J.Mark Ramseyer)事件”。美国国内对其发表的论文《太平洋战争中的性契约(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引发的与慰安妇相关的历史歪曲问题的积极回应,以及拉姆塞耶对此的驳斥,以及倡导这一点的学者拉姆塞耶的著作开始出现在媒体上。

在本文中,我们试图通过空间阐明历史记录和事实问题,同时厘清拉姆齐事件的背景和性质。河野谈话后,日本对日本军队慰安妇受害者问题做出了明确规定,后来被表述为日本政府的官方立场。但2008年安倍政府上台后,有关日本帝国主义时代侵略剥削别国、侵犯人权的部分开始遭到系统性污染或破坏。而日本通过对历史事实的污染,扩大了历史战争的现场。那个现场是美国。如果说过去的战场是亚洲,那么现在围绕日军慰安妇的历史主战场就是美国。“拉姆塞耶事件”不仅仅是个别学者的问题,而是战争责任国之间的问题,是人类必须解决的根本问题。即使对于解决拉姆塞耶事件,空间的重要性也不为过,该事件污染了历史事实,加深了当今各国人民之间的仇恨和冲突。

希望本文对运用世界各国人民之间冲突的责任和法律规制权力有所帮助。通过空间召唤对慰安所的位置进行密切追踪和调查,有助于冷静地回顾日本帝国“疯狂时代”对移民的侵略和剥削历史。洞察“堕落的现实”。想要给予。

[关键词] 拉姆塞耶,“日军慰安妇”,历史战争,东北亚,空间轉回

논문투고일: 2024년 1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3일 ||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2일

\* The Korea-China Relations Institute at Wonkwang University

\*\* The history department at Yanbian University in china